

6·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김 영 호**

1. 서 론
2. 6·25전쟁의 국내적 영향
3.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
4. 결 론

1. 서 론

6·25전쟁은 해방과 건국 이후 시작된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도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의 전개과정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6·25전쟁 연구는 전쟁의 발발 원인, 전개과정, 휴전과 관련된 주제에 그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하면 6·25전쟁이 끼친 국내외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6·25전쟁 영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재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학문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은 전쟁의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된 국지전이었지만 참전 군인의 규모와 희생자 숫자에 비추어볼 때 ‘축소판 제3차 세계대전’이었다.¹⁾ 전쟁의 지역적 범위가 좁혀지면서 오히려 양측에 의해 사용된 군사력의 집중도가 높아진 결과 전쟁 기간 중 민간인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남침에 의해 시작된 이 전쟁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두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아시아의 신흥공산국가였던 중국이 개입한 국제전의 양상을 띠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런 참혹한 전쟁의 경험 때문에 전쟁의 비도덕적,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²⁾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전쟁의 대내외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이론적 고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쟁의 대내외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³⁾

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이 끼친 중요한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우선 이 글은 6·25전쟁이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이 어떻게 국가기반능력을 구축하고 베버(Max Weber)가 정의하는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대외의존성으로 인하여 ‘렌티어 국가’(rentier state)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

1) 6·25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대안물’(substitute)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3. 스투크의 입장은 6·25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강대국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의 피해 당사자였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또 다른 세계대전의 축소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채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6·25가 남한에 미친 영향』, 『계간 사상』, 1990년 봄, p.186.

3)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김영호 외저, 『6·25전쟁의 재인식』, 기파랑, 2010 참조.

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6·25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이 제시한 '제조건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사회로 발전했다는 점과 반공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내적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은 6·25전쟁이 끼친 국제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6·25전쟁은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정치적 영향은 유럽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이 어떻게 유럽 나토(NATO)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동북아 지역 냉전 구조 고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6·25전쟁 이후 적국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고 한국, 대만, 필리핀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일련의 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6·25전쟁이 국제정치이론과 유엔 체제에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6·25전쟁 발발 6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질서 형성 과정에서 6·25전쟁이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6·25전쟁으로부터 도출해야 할 역사적 교훈들을 제시할 것이다.

2. 6·25전쟁의 국내적 영향

6·25전쟁은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건국을 전후하여 남한 내에 존재했던 체제대항무력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여수·순천반란 사건과 남한 내 게릴라 세력의 존재에서 보듯이 이러한 대항무력 세력의 존재로 인하여 건국 그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국 이후에도 이런 세력을 제거하는 데 많은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이런 대항세력의 존재와 남침시 그들에 의한 대규모 인민봉기 가능성을 내세워 스탈린의 남침 지원을 끌어냈다는 것을 소련 비밀문서들은 보여주고 있다.⁴⁾ 베버(Max Weber)는 “국가를 일정 영토 내부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⁵⁾ 그 기준에 비추어볼 때 남한 내에서 근대국가 대한민국에 의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은 6·25전쟁 이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6·25전쟁은 남한 내에 존재하던 대항무력 세력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⁶⁾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대국가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건국 직후 근대국가로서 군사력과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능력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6·25전쟁 이후 군사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면서 근대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6·25전쟁 직전 채 10만명이 되지 않았던 국군은 종전시 55만명으로 증강되었고, 한미 합의에 따라서 20개 사단 65만 5천명으로 증원을 보장받게 되었다.⁷⁾ 이러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은 6·25전쟁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커다란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능했다. 6·25전쟁 직전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긴채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킨 바 있다. 6·25전쟁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은 ‘일본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⁸⁾ 이런 전략적 전환

4) 이 회담 기록은 Kathryn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39(July 2002), pp.9~11 참조.

5)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78.

6) 이 점은 노재봉,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의의」,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기파랑, 2008), p.28 참조.

7) 온창일, 「6·25전쟁과 한국군의 팽창」, 『한국과 6·25전쟁』(유영익, 이채진 편), 연세대출판부, 2002, p.82.

8) 이종원, 「6·25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변천」, 『한국과 6·25전쟁』(유영익, 이채진 편), 연세대출판부, 2002), p.316.

의 결과 미국은 두개 미군 사단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국군의 대폭적 증강을 지원하게 된다.

군사력의 대규모 증강과 함께 이승만대통령의 ‘벼랑끝 외교’의 결과 체결된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 되었다.⁹⁾ 이승만은 국제정치질서가 미소 사이의 냉전체제로 재편된 상황 하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6·25전쟁 직전 미국에게 군사동맹 체결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 거부와 반공포로 석방 등과 같은 ‘벼랑끝 외교’ 전략을 통해서 결국 미국과 동맹 체결에 성공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대북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동맹 체결은 한국이 대륙문명권에서 해양문명권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 중심의 개방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어 경제적 번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군의 증강은 국내정치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⁰⁾ 전쟁 직후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군부는 가장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집단이었다. 전시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유지하고 군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뒤이어 등장한 장면정부는 군부에 대한 계속된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장면은 4·19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시 60만명이던 군의 규모를 10만으로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것이었고 군의 불만을 야기하고 말았던 것이다.¹¹⁾ 개발도상국에서 군부 개입의 성공 여부는 문민정부의 효율성 정도와 국민의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¹²⁾ 한국정치사에서 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6·25전쟁 직후

9) 차상철, 「건국과 보국」,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이인호 외편), 기파랑, 2009, p.481.

10)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제4수정증보판), 박영사, 2010, p.403.

11) 김영명,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8, p.151.

12) *Ibid.*

단행된 대규모 국군의 증강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 중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신을 맥아더에게 발송했다. 미국은 ‘모든 지휘권’이라는 용어에 오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작전지휘권’만 이양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6·25전쟁 중에도 한국은 엄연히 한국군에 대한 인사와 부대편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 및 유엔참전국의 협력 하에 작전의 효율성을 높여 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군은 미국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단일 작전 지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의 창설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양되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와 같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될 경우 6·25전쟁 초기 이관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국가재정능력의 측면에서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은 6·25전쟁 직전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그 기반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에 걸쳐 한국은 약 27억달러의 해외원조를 받았다.¹³⁾ 이 중 6·25전쟁 휴전 직후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부흥원조가 50%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원조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원조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이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전쟁 이후 미국 중심의 대외원조가 국가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과도한 대외원조의존성으로 인하여 한국은 ‘렌티어 국

13)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p.341.

가'(rentier state)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¹⁴⁾ '렌티어 국가'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국가재정 수입의 전부 혹은 많은 부분을 원유와 같은 자원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국가를 말한다. 이때 국가수입이 일종의 렌트, 즉 지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를 '렌티어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국가는 국가 수입을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원래 이 개념은 원유와 광물을 팔아서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석유수출기구'(OPEC)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중동의 '렌티어 국가'들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의 민주화가 지지부진하고 권위주의체제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6·25전쟁 직후 한국과 같이 외국의 경제원조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훨씬 능가하는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군사력은 경제력의 뒷받침없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경제력을 넘어서서 군사력을 과대팽창(overextention)시킬 경우 국가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¹⁵⁾ 그런데 6·25전쟁 직후 재정적 기반이 취약했던 한국이 그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60만 대군을 창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렌티어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승만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종종 국회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승만이 전쟁 기간 중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협박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렌티어적 국가 성격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렌티어 국가적 성격은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궤

14) 이 점은 Gregg Brazinsky,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23~26; 그레그 브레진스키, 「한국민주주의의 가능성」,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pp.656~660 참조.

15)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New York: Vintage Books, 1989), p.xvi.

도를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이승만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한국의 렌티어적 국가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이다.¹⁶⁾

6·25전쟁이 국내정치에 미친 또 다른 가장 커다란 영향 중 하나는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이 민주사회의 특징으로 지적한 “제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s)을 초래했다는 점이다.¹⁷⁾ 토크빌은 제조건의 평등화는 저항할 수 없는 혁명적 현상으로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것이 만들어낸 잔해물을 헤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⁸⁾ 토크빌이 말하는 평등은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정과 보통선거권의 확립으로 인하여 법적 평등이 주어졌지만 근대민주사회의 특징인 사회적 평등이 실현된 것은 6·25전쟁 이후의 일이다.

농지개혁은 사회적 평등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방 직후부터 농지개혁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6·25전쟁 직전 농지 70~80%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다.¹⁹⁾ 6·25전쟁은 농지개혁을 더욱 촉진시켰고 한국 사회에서 지주제도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단행되었다.²⁰⁾ 농지개혁은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후 농지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한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산업화에 성공하게 된다. 또한 지주제의 폐기와 함께 신분

16) 브레진스키, 『한국민주주의의 가능성』, pp.659~660.

17) 이 점은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New York: Norton, 2005), p.30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p.34;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2006, p.107; 장상환,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p. 153; 전상인, 『6·25전쟁과 한국의 사회변동, 그리고 사회적 유산』 『6·25전쟁의 재인식』(강규형 외편), 기과당, 2010, pp.434~435 참조.

18) Alexis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I, trans. by Arthur Goldhammer (New York: Liberty of America, 2004), pp.6~7.

19) 김일영, 『건국과 부국』, 생각의 나무, 2004, p.118.

20) 장상환, 위의 논문, pp.146~152.

없는 평등사회가 도래하면서 6·25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토크빌이 말하는 민주사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모든 인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한국인의 평등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아가 전쟁 기간 중 일어난 인구이동과 급격한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는 불평등한 신분사회가 갖고 있던 유대감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원자화되고 만다. 6·25전쟁 이후 국가는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집단사회를 통하지 않고 곧 바로 국민과 직접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국민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시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계약적 방식을 통해서 근대국가 성립되는 서구의 과정과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는 6·25전쟁의 영향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성 확보는 위로부터의 동원체제를 통한 단기간 내에 압축적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성숙한 시민사회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정당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6·25전쟁의 영향으로 강화된 한국인의 평등관은 평등주의적 열정과 질투심으로 항상 타락할 소지를 안고 있다.²¹⁾ 민주사회는 평등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망각하게 만든다. 이런 양상은 한국 사회가 하향평준화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과 같은 평등의식이 매우 강한 민주사회에서 평등에 관한 존중없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치의 과제는 평등 의식을 존중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고 진작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토크빌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평등의식이 '노예

21) 이 점은 Jean-Claude Lamberti, *Tocqueville and the Two Democracies*, trans. by Arthur Goldhammer(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48 참조.

상태 하의 평등'을 선호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존중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다.

6·25전쟁의 결과 한국인의 반공의식이 매우 강화되었다.²²⁾ 그 영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우선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해 전쟁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으로부터 남하한 피난민들과 석방된 반공포로들 때문에 한국사회의 반공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반공의식의 강화는 한국정치에서 중도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빼앗고 말았다.²³⁾ 건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세력은 6·25전쟁 직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²⁴⁾ 그러나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남북협상을 주도한 중도세력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우익보수세력을 제외한 여타 정치세력은 그 존재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서구의 보수주의와 마찬가지로 특정의 제도와 관행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의 도전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생겨났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보수주의는 그 자체의 독특한 내재적 성격을 선형적으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도전과 공격의 성격에 따라서 보수주의적 대응 양식이 달라질 것이고 보수주의의 내용도 결정될 것이다. 보수주의가 직면하는 위기는 시공의 차원에 따라서 독특하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발생하는 시대적,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보수주의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달리 초국가적 보수주의는 성립될 수 없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의 일반화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전과 공격에 대한 응전과 방어로써의 보수주의는 '상황적'일

22) 이 점은 김학준, 『한국전쟁』, pp.399~400; 김일영, 『건국과 부국』, p.173; 김충남, 「한국 국가건설의 도전과 이승만의 응전」,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p.451 등을 참조.

23) 전상인, 「한국전쟁과 정계구도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한국사회학회 편), 풀빛, 1992), p.291.

24) 김학준, 『한국전쟁』, p.399.

뿐만 아니라 상대 이념과의 차별화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위상적'(位相的)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불리는 버크(Edmund Burke)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급진성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주의는 그 형성 과정에서 위상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은 적화시키려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일어난 6·25전쟁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수주의는 서구 보수주의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한 철학적, 종교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공주의에 기초한 정치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²⁶⁾ 이런 반공주의적 경향은 6·25전쟁의 경험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고 1987년을 기점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한 화해정책이 본격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보수주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사상을 더욱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요청받고 있다.²⁷⁾

반공의식의 강화와 함께 6·25전쟁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전쟁 도발 직전에 남한에 대해서 일련의 평화공세를 전개했다. 전쟁 발발 1주일전 북한은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과 남포당 지도자 김삼룡과 이주화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고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북한은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다 마친 상태 하에서 남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평화전술을 채택했던 것이다.

25) 이 점에 관해서는 Samuel Huntington, "Conservatism as an Ide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1(1957), p.455;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2004, pp.305~306.

26) 김용민, 「서구 보수주의의 기원과 발전」, 『한국의 보수주의』(김병국 외저), 인간사랑, 1999, p.47.

27) 이 점은 Jerry Z. Muller, "Introduction", *Conservatism: an Anthology of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from David Hume to the Presen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3 참조.

이런 전술은 이미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과의 비밀회담에서 논의된 것이었다.²⁸⁾ 이 두 사람은 남침할 경우 남북한 주민 모두 전쟁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우려하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 직전 위장 평화 공세를 취하고 남한이 먼저 전쟁을 도발한 것처럼 꾸몄다. 당시 북한의 신문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기록인 『조선통사』도 북침에 대한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²⁹⁾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런 선전공세는 전면기습남침을 숨기고 남북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조치였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전쟁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일련의 대화 제의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70년대초 미중관계 개선으로 주변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자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지만 불과 1년뒤 남북관계는 또다시 경색되고 말았다. 전쟁 직전 북한의 일련의 위장평화공세는 그 이후 북한 제의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6·25전쟁이 끼친 사회적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자극했다는 점이다.³⁰⁾ 전쟁 중 대학생들에게 병역 연기 또는 면제의 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다. 또한 집이나 재물이 허망하게 파괴되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전쟁의 영향과 함께 이승만정부의 6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1950년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교육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문맹이 퇴치되고 국

28) 이 회담 기록은 Kathryn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 39(July 2002), pp.9~11 참조.

29) 북한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으로는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 한국언론연구원, 1990, pp.12~13 참조.

30) 김경동, 「오늘의 시점에서 본 6·25의 사회적 흔적」,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일보사 편), 동아일보사, 1988, p.450; 정성호, 「한국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pp.47~48.

민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 의식이 향상됨으로써 점진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문화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전쟁 기간 중 본격적으로 실시된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는 국민형성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³¹⁾ 3·1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근대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민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³²⁾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저항적 정체성'에 머물러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국인의 정체성은 여전히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³³⁾ 이러한 정체성의 모호성은 6·25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6·25전쟁 이후 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고한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6·25전쟁이 미친 정치적 영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영향의 하나는 재벌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재벌의 등장 여건은 6·25전쟁에 의해 마련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산업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전쟁의 피해는 비극적이었지만 한국 사회 재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귀속기업체 불하, 미국 중심의 원조 물자와 재정 지원, 한국 정부의 재정 융자와 은행 대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재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³⁴⁾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시장에서 새롭게 창출된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급격하게 성장해 나갔다. 전후 복구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방직공업 등 시설 복구에 많은 지원을 했고, '3백산업'(三白産業: 면방, 제당, 제분)을 중심으로 급증한 소비재 수요는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³⁵⁾ 6·25

3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pp.204~205.

32)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과 실천』, 녹두출판사, 1984, p.349.

33) 김일영, 『건국과 부국』, pp.170~171.

34) 류상영, 「6·25전쟁과 재벌형성의 역사적 기원」, 『한국과 6·25전쟁』(유영익·이재진 편), 연세대출판부, 2002, p.173.

35) 류상영, *ibid.*, p.150.

전쟁 직후 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6·25전쟁이 끼친 국내정치적 영향을 논의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전쟁이 북한에 끼친 영향이다. 6·25전쟁 이후 김일성은 북한 내부에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 정적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쟁 직전 북한에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토착 공산주의세력, 중국에서 돌아온 연안파, 소련 한인으로 구성된 갑산파 등이 권력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원래 소련은 북한 최고 지도자 선택 과정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놓고 심각하게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스탈린에 의해 김일성이 낙점을 받았지만 김일성과 박헌영의 경쟁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남침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전쟁 직전 스탈린과의 비밀회담에서 그들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남한에서는 이승만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을 설득했다.³⁷⁾ 그들은 북한 남침시 남한 내부에 있는 20만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스탈린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6·25전쟁 발발 직전에 남한 내의 게릴라 세력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남한 내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책임은 김일성과 박헌영 모두에게 공동으로 있었지만 김일성은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을 미제국주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덮어씌워 모두 숙청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그 이후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제를 구축하고 부자세습이라는 공산주의사에서 전례없는 시대착오적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36) 이지수,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이인호 외 편), 기과당, 2009, pp.76~77.

37)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 39(July 2002), pp.9~11.

3.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

6·25전쟁은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유럽 냉전 질서의 군사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³⁸⁾ 1949년 결정되어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나토(NATO)는 6·25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산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무장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나토 가입국 병력은 약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6개 사단을 유럽에 주둔시키게 된다. 그리스와 터키의 나토 가입으로 회원국 숫자가 늘어났다. 6·25전쟁 이후 미국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독의 재무장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치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팽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유럽 전역이 전화에 휩싸이고 말았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취해졌다. 6·25전쟁 이후 미국은 유럽 방어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미소 대결이라는 양극적 질서 하에서 일어난 6·25전쟁은 국제정치에서 위신과 신뢰도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미국에게 일깨워 주었다. 미국의 도움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의해 적화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위신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이 적화된다면 자유진영 국가들은 공산주의와 대결하려는 미국의 결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미국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었다. 미국의 신뢰도 약화는 미국의 동맹 전략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었다. 동맹에는 일반적으로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균형 방식의 동맹'과 그 반대로 위협적인 국가에 동조하는 '편승(bandwagon) 방식의 동맹'이 있다.³⁹⁾ 미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공산세력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동맹권 이탈과 소련 편승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부정적 현상을 막기 위

38) Stueck, *The Korean War*, pp.4~5.

39) Stepha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17~21.

해 미국은 유럽에서는 나토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국가들과 일련의 쌍무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6·25전쟁은 동북아 지역 냉전 질서 형성과 고착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서는 1947년 미국이 유럽경제부흥계획인인 '마셜플랜'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소련이 코민포름을 결정하고 동구권을 소비에트화하면서 냉전이 본격화되었다.⁴⁰⁾ 이와 달리 동북아 지역은 1949년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지역적 세력균형이 급격하게 공산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었다. 중국이 대소일변도 정책을 선언한 후 스탈린이 장개석과의 동맹조약을 폐기처분하고 모택동과 새로운 중소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북아 지역 냉전 질서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⁴¹⁾ 스탈린은 중소동맹조약 체결과 동시에 김일성의 남침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동북아 지역 냉전 질서는 냉전 초기 6·25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으면서 고착화되었다.

6·25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전쟁을 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유럽의 티도와 같이 모택동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이용하여 소련과 중국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썰기전략'을 추구했다.⁴²⁾ 1949년 12월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과 새로운 군사동맹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을 때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은 유명한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소련이 중국의 만주와 신장 지역을 식민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

40) 이 점은 Scott D. Parrish and Mikhail M. Narinsky,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74: Two Report", Working Paper No. 9, Woodrow Wilson Center, Washington, D.C., pp.1~51 참조.

41) 개디스는 세력균형과 같은 구체적 정책적 이슈를 둘러싸고 미소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된 유럽과 달리 동북아지역은 두 초강대국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하여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분명한 점은 중국 공산혁명 성공 이후 스탈린이 동북아지역의 급격하게 변화된 세력균형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지역의 냉전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개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북아 냉전이 단순히 부주의와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개디스의 주장은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82 참조.

42)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99.

국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슬라브 만주국의 확대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⁴³⁾ 그러나 중국의 6·25전쟁 개입은 미국이 추구한 '빼기전략'이 희망적 사고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국의 대소일변도정책이 6·25전쟁 이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 블록 중심의 양극적 질서로 재편된 전후 국제정치질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했다. 6·25전쟁 이후 고착된 양극적 질서가 해빙기를 맞아 다극적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은 1960년대말 키신저(Henry Kissinger)에 의해 주도된 '삼각외교'(triangular diplomacy)를 통해 미중관계 개선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⁴⁴⁾

6·25전쟁 이후 미국은 적국이었던 일본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게 된다. 대소련 봉쇄정책을 입안한 미국의 전략가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일본을 완전히 패배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패배는 오히려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와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수립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⁴⁵⁾ 중국의 공산화와 6·25전쟁은 이런 경고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대소봉쇄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주화된 일본을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 만드는 것이 긴요하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 1951년 미국은 소련을 배제하고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일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된다.⁴⁶⁾ 이 조약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한 '이중의 봉쇄정책'(dual

43) Thomas J. Schoenbaum, *Waging Peace and War*(New York: Simon & Schuster, 1988), pp.222~223.

44) Henry Kissinger, *Diplomacy*(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p.723.

45)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pp.51~52.

46) Kimie Hara,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The Pacific Review*, Vol.12, No.4(1999), pp.517~520; Michael Schaller,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Oxford, 1985), pp.293~294.

containment policy)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켜 건국 이후 최초로 동북아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같은 해 미국은 필리핀과도 상호방위조약을 맺는다. 또한 미국은 1953년 한국, 1954년 대만과 군사방위조약을 각각 체결하게 된다. 1954년 미국은 동남아조약기구(SEATO)를 결성하여 동남아 지역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전쟁 직전 체결된 중소군사동맹조약과 함께 미국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일련의 동맹조약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적 냉전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6·25전쟁 이후 체결된 일련의 동맹 조약은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 안보는 다자주의적 동맹이 아니라 쌍무적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봉쇄선을 중심으로 자유세력과 공산세력의 구분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안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다. 공산세력은 나토에 대항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창설했다. 이와 달리 동북아 지역은 일본 제국주의적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가운데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산세력 팽창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주의적 동맹체제 구축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6·25전쟁 직후 형성된 이러한 쌍무주의적 안보동맹체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과 대만과 체결한 군사방위조약은 ‘애치슨 라인’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6·25전쟁 직전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도서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전후 제한된 미국 국방비와 군사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중국 내전에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과 소련과의 전면전 발생시 군사전략적 가치가 낮은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바로 미제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서 대만 방위에 즉각적으로 나섰다. 이것은 중국 공산화 이

후 중국 내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의 기존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아가 조약 비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상원 내부의 친중국 세력은 일본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⁴⁷⁾ 그 결과 1952년 일본은 대만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된다. 6·25전쟁 이후 이런 일련의 미국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는 매우 어렵게 된다.

‘에치슨 라인’의 철회와 함께 6·25전쟁 이후 미국은 공산세력의 팽창이 현실화되면서 국민적 여론을 업고 대규모 군비 증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미국은 1947년 국방비를 130억불로 상한선을 그어두고 있었고, 1950년의 경우 150억불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⁴⁸⁾ 그러나 소련의 핵 실험 성공과 함께 미국 내에서는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유명한 미국 국가안보회의 문서 NSC-68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문서는 미국 국방비를 500억불로 세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수정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이런 국방비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여 남한을 미국방어선에서 배제하여 의도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배치된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이후 NSC-68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개입 이후 전쟁 소요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6·25전쟁의 결과 미국은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과 함께 본격적인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로 등장하게 된다.

6·25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약소국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국제정치질서가 냉전과 같이 양극적 구조로 재편되어 있을 때에는 초강대국이 자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경우 개입하지 않고

47) Schaller, *ibid.*, p.294.

48) Kenneth W. Condit,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7~1950*, Vol. II (Wilmington, DE: M. Glazier, 1979), pp.213~214.

다른 국가에게 책임전가(buck-passing)하는 것이 어렵다.⁴⁹⁾ 나아가 양극적 질서 하에서는 각자의 영향권 내에 있는 약소국의 손실의 결과로 초강대국의 영향력과 위신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들은 주변부의 분쟁에 과잉반응(overreaction)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⁵⁰⁾ 그러나 초강대국들이 주변부의 문제로 과도하게 힘을 허비하게 될 경우 중심부의 세력균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더라도 자체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위기 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6·25전쟁은 두 초강대국 사이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지만 미국이 전쟁 개입 초기부터 제한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 않았다.⁵¹⁾ 전쟁 기간 중 소련 역시 공군력을 만주 지역에 투입했지만 유엔군 전선 후방 지역으로 소련 공군을 투입하지 않는 자체력을 발휘함으로써 6·25전쟁은 제한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⁵²⁾

6·25전쟁은 냉전체제를 가장 잘 이론화시켰다는 구조주의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혹은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이론적 한계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신현실주의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두 초강대국에게 냉전체제 유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⁵³⁾ 우선 국제정치체제 유지 기능을 구조가 아니라 국가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구조주의 이론으로서 신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⁵⁴⁾ 나아가 소련은 북한과 중

49)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McGraw-Hill, 1979), pp.170~171; Thomas Christensen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Spring 1990), pp.140~144.

50) Waltz, *ibid.*, p.172.

51) Memorandum by Philip Jessup, June 25, 195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칭), Vol. VII(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160.

52) Jon Holliday, "Air Operations in Korea: The Soviet Side of the Story", William J. Williams, ed., *A Revolutionary War*(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3), p.150.

53) Waltz, *ibid.*, pp.204~209.

54) Kenneth W. Thompson, *Schools of Thought in International Relations*(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p.143.

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6·25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냉전 체제 유지가 아니라 타파 혹은 변화를 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6·25전쟁은 구조를 내세우는 신현실주의가 논리적, 경험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25전쟁은 미국이 개입한 대외전쟁 중 최초의 제한전이였다. 이 경험은 6·25전쟁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전쟁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포츠담선언에서 '무조건항복'을 일본에게 제시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6·25전쟁 중 맥아더는 "승리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주로의 확전과 공산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주장했다. 이런 맥아더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제한전을 추구한 트루먼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고 미국 헌법이 보장한 '문민우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⁵⁵⁾ 맥아더 해임 이후 미국은 서울을 재탈환하고 '무조건항복'이 아니라 휴전협상을 통해서 제한전으로 전쟁을 끝내게 된다. 6·25전쟁 이전 미국 외교는 이상주의적 노선 하에서 완전한 승리추구와 그 이후 고립주의로의 회귀라는 커다란 진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미국 외교는 제한전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노선으로 전환되고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국제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냉전의 평화적 종식에 기여하게 된다.

6·25전쟁은 유엔이 국제분쟁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참전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 하의 자유선거와 유엔총회의 승인을 거쳐 탄생한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 결의를 통해서 6·25전쟁 참전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엔을 통한 미국의 6·25전쟁 참전은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유엔결의안을 통한 미국의 참전은 전쟁선포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⁵⁶⁾ 유엔결의안이

55) John W. Spanier, *The Truman-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New York: Norton, 1965), p.13.

56) Louis Fisher, "The Korean War: On What Basis Did Truman Ac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No. 1 (January 1995), pp.32~33.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회의 승인없이 미군을 투입시켰고 6·25전쟁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엔 결의안을 통해 사후적으로 개입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판은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고 휴전협상이 지연되면서 유엔군 사상자가 늘어나자 미국 내에서는 6·25전쟁이 '트루먼의 전쟁'이라는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흔히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중국의 개입과 함께 전쟁 상황이 악화되자 트루먼 행정부는 비난하기 위한 사후적 해석의 측면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을 통한 미국의 참전 결정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⁵⁷⁾ 예를 들어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코널리(Tom Connally) 의원은 도둑이 집을 침범할 경우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도둑을 총으로 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문제가 의회로 넘어올 경우 장기간에 걸친 논란으로 인해 미국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그는 트루먼에게 미국은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서 유엔 결의에 따라 6·25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사실은 트루먼이 6·25전쟁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다거나 군사력 투입 후 기정사실화된 것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맥아더는 전쟁 발발 10일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만약 소련과 북한의 전쟁 계획대로 북한군이 서울에 3일간 지체하지 않고 더 빨리 남쪽으로 진격했다면 미국이 참전했다라도 그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맥아더는 회고하고 있다. 한국 참전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참전 결정이 지연되었다면 전쟁 상황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참전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미국 국내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한 신속한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정은 한국의 적화를 막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엔이 유엔군의 깃발 하에 최초로 6·25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국제기구

57) Tom Connally, *My Name is Tom Connally*(New York: Crowell, 1954), p.346.

로서 유엔 체제에 6·25전쟁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유엔은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라는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상임이사국을 구성하는 강대국에게 거부권을 주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유엔체제에 반영했다. 그러나 유엔의 입안자들은 미소 냉전이 상임이사국 기능의 마비를 가져와서 유엔의 순조로운 작동을 방해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엔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안보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안보리에서 계속된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the 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채택하게 된다.⁵⁸⁾ 이 결의안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이 안보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상임이사국들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와 침략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엔총회가 그 문제를 즉시 토론하여 집단적 조치에 관해 유엔회원국들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켰다. 이로써 안보리를 대신하여 총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기능을 떠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전쟁 수행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결의안 1950년 11월 본격화된 중국의 6·25전쟁 개입 이후 이 문제에 유엔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지만 6·25전쟁 기간 중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유엔 현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엔의 작동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60년대초 독립한 신생국들의 발언권이 유엔 총회에서 강화되어 두 초강대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결의안들이 채택되었을 때 제3세계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58) 결의안 내용은 Resolution 376 (V), October 7, 1950, *FRUS*, 1950, Vol. VII, pp.904~906 참조.

4. 결 론

6·25전쟁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49년초부터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남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공산혁명의 성공과 함께 스탈린은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정세가 공산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았다.⁵⁹⁾ 그렇지만 스탈린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남침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스탈린은 유고 공산당 지도자 질라스(Milovan Djilas)가 교황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을 때 “교황이 도대체 몇 개 군 사단 병력을 갖고 있는나?”고 물을 정도였다.⁶⁰⁾ 스탈린은 전쟁 직전 최신 T-34 소련제 탱크를 비롯하여 북한에게 대규모 군비지원을 했다. 전쟁 초기 북한의 우세한 전략에 밀린 경험 때문에 한국은 대북한 군사적 균형과 억지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전쟁 직후 한국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0만대 군을 창설하게 된 것은 6·25전쟁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었다. 나아가 이승만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대북한 억지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야 된다고 믿고 이를 외교적으로 관철시켰던 것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의 초석이였다. 21세기에도 한미동맹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등 국력의 모든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성립된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및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또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평시동맹을 체결하여

59)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pp.9~11.

60)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Michael B. Petrovich, tra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114.

동북아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60년이 넘는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당시 자주노선과 '동북아 균형자노선'을 내세워 한미관계는 소원해졌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통일의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한국과 미국은 과거처럼 단순히 군사적 동맹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서 과거와 같은 수혜자의 지위를 벗어나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시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도움을 받았다.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부상한 한국은 6·25전쟁 당시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전쟁 발발 60년 후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열악한 인권 상황 하에서 기아 선상을 헤매는 '실패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생 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건국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방 공산 3국의 긴밀한 사전 협조 하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하여 존망의 기로에 섰다. 국내정치적으로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core value)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6·25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세계와 함께 싸운 '호국전쟁'이었다. 최근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분기점으로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잡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6·25전쟁 연구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호국의 노력이 실패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한반도 상에서는 여전히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한반도가 여전히 평화상태가 아니라 정전상태, 즉 준전시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6·25전쟁 유산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1954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공산측의 무모한 요구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후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6·25전쟁의 법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교차승인의 일환으로 제기된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적극적용을 나서지 않음으로써 평화상태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이라는 외부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과 6·25전쟁 유산의 완전한 청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발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6·25전쟁 직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전쟁 60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⁶¹⁾ 한반도에는 6·25전쟁 이전과 달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의한 확고한 대북한 억지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다. 중국이 6·25전쟁 당시와 같이 북한의 재남침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변국가들과 미해결된 영토 문제가 남아 있지만 과거 제국주의 시대처럼 이 문제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지역은 구한말과 달리 북한을

61)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08: A Time of Challenge", *Asian Survey*, Vol.49, No.1(2009), p.5.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국제협력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처럼 팽창적 민족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주변국가들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 노선을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임시방편적일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6·25전쟁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를 위한 다자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자협력체제의 구축은 기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과 같은 쌍무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기능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자협력체 형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한 나머지 지금까지 6·25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 재발에 기여한 양자 동맹을 선불리 해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6·25전쟁 직전의 중국 공산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재부상은 21세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질서 변화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해 동북아 평화 정책을 추진해나가던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늪에 빠지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주의 노선을 대변하는 키신저는 '삼각외교'(triangular diplomacy)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약화된 미국의 국력을 만회하기 위해 숨돌릴 틈을 만들고 대소련 봉쇄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 카드를 던지게 된다. 당시 악화되고 있던 중소관계도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관계 개선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6·25전쟁 종식 20년 후 키신저 외교를 통하여 비로소 중국은 공산혁명과 6·25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구축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1세기 중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질서를 G2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양자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어떻게 중국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중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나간다면 기존 동맹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²⁾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포용과 균형’을 적절히 배합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³⁾ 우선 중국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포용정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1970년대와는 다른 국력의 수준을 갖고 있는 동맹국가들이다. 미국은 양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존 동맹관계에 기초한 세력균형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이 끼친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 글에서 다룬 주제들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한 영역에 걸쳐서 향후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의 경우 이들 국가들이 참전하게 된 국내외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하고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들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자신들의 국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국제정치질서가 미소 대결이라는 양극적 구조로 갈라진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세력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 참전을 결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전쟁 발발과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과거 공산권의 자료를 다국적 차원에서 연구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참전 국가들의 외교정책과 관련한 다국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정치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이들 국가들의 참전 배경과 관련

62) Robert Kagan, "Obama's Year One", *World Affairs*(January/February 2010), pp.14~15.

63) Michael J. Green, "Asia in the Debate on American Grand Strateg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2, No.1(Winter 2009), p.21.

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한다면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을 다차원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1. 3. 14,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6·25전쟁, 냉전, 렌티어 국가, 알렉시스 토크빌, 한미동맹, 반공주의, 나토, 썬기전략, 신현실주의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s of the Korean War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Kim, Young-ho

The Korea War can be construed a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event of modern Korean history. The war had great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ld War and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research on the war has been focused on the war's origins and developments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armistice negotiations. As a result, the studie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acts of the war has been relatively few.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war,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the extant research on the subject and to present new research agenda. The horrendous experiences of the war tended to put emphasis on the immoral and negative aspects of the Korea War. This tendency resulted in the neglect of the objective and theoretical studies of the war's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s. The war's 60th anniversary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to begin the study on the subject in earnest.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war'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s a modern state. It will analyze how the ROK developed its military and financial capabilities as a modern state with specific reference to Max Weber's definition of the state. The articles will argue that the ROK became a 'rentier state' because of its over-dependence on foreign aid for its state budgets. It will analyze the impact of the 'rentier stateness'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It will also argue that Korean society has become a Tocquevillian democratic society with the end of the war and a strong anti-communistic society.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war had great impact on the Cold War development in Europe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contributed to the militarization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article also explains why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sign a series of mutual defense treaties with Japan, ROK, and Taiwan during and at the end of the war. It will also discuss the impact of the war on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It will conclude by discussing what kind of lessons the states in the region can draw from the war to keep the region peaceful and prosperous with the rise of China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 The Korean War, Cold War, Rentier State, Alexis Tocqueville, US-ROK Alliance, Anti-communism, NATO, Wedge Strategy, Neorealism